

2014

연구보고서-4

I S S U E P A P E R


#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립


수행과제명 •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과제책임자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립\*

수행과제명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과제책임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chung@kwidimail.re.kr

### 요약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많은 학생 미혼모에게 학업 지속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 운영 체  
제를 개편하고 예산 확충과 학생 미혼모 발생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매  
뉴얼을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하여야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정해숙·최윤정·최자은(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서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차별결정이 있기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임신한 학생에게 학생생활규정 등을 근거로 휴학이나 전학, 자퇴 권유 등의 징계가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음. 실제로 13세~18세 미혼모의 84.9%가 학업중단 상태(제석봉 외, 2008)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임신한 학생 대부분이 임신사실이 알려질 경우 퇴학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근거로 학교로부터 자퇴나 전학을 강요받거나, 학생 미혼모 스스로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는 청소년기 학생의 임신은 ‘학생답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일탈행위로 간주되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의 존재는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10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학칙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 침해이자 미혼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차별행위임. 게다가 10대 미혼모의 학업 중단은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져 미혼모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소외계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대학 진학률이 9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취업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져, 평생 동안 실업상태 혹은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빈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임.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혼모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지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와 그 자녀가 빈곤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국가·사회적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2010. 8.)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개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청소년

미혼모가 국가의 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모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음.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은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 그 동안 교육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0년 4개 기관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래, 2013년 현재 전국에 18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1년간 전국 18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 미혼모<sup>1)</sup>는 총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게다가 한부모가족복지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혼모자시설이 폐쇄 또는 다른 유형의 시설로 전환되어야 함에 따라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중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에 설치된 위탁교육기관 7개소가 사실상 폐지될 상황에 놓여있음.<sup>2)</sup> 따라서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 학생 미혼모라 함은 중등학령기에 미혼모가 된 청소년을 의미하며,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신분이어야 함.
- 2) 2014년 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접촉한 일부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입양기관에서의 미혼모자시설 폐지 등의 문제로 하반기부터 위탁교육생을 받지 않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과제

### 1) 교육청별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과 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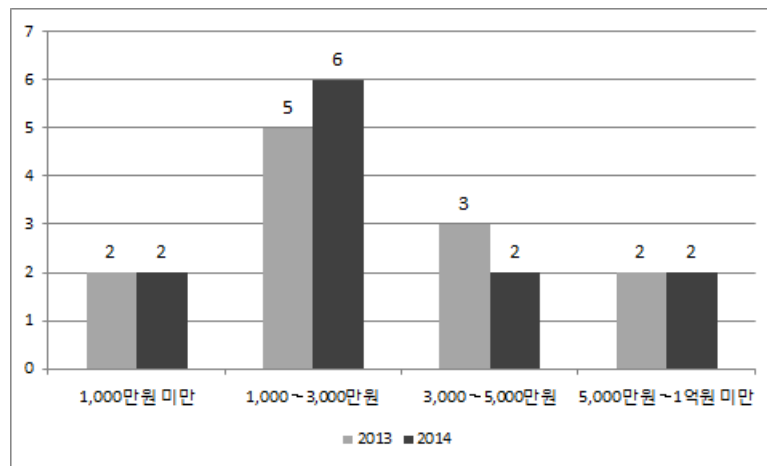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은 총 18개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 또는 2개의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각각 2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경북교육청(대구혜림원), 세종시와 충북교육청(자모원)은 동일한 곳을 함께 지정·운영하고 있음.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반 대안교육기관인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혼모자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7개가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임. 따라서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이 폐쇄 또는 다른 시설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경북교육청은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 형편임.

〈표 1〉 교육청별 위탁교육기관 지정년도 및 기관명

교육청	위탁 지정년도	위탁교육기관명	비고
서울시	2010	나래대안학교	-
부산광역시	2010	마리아모성원	-
	2010	사랑샘	입양기관
인천광역시	2010	바다의 별 학교	-
대구광역시	2010	대구혜림원	입양기관
대전광역시	2012	아침뜰	입양기관
울산광역시	2011	울산시민학교	일반 대안교육기관
광주광역시	2011	우리집	입양기관
세종시	2012	해성학교(자모원)	-
경기도	2010	고운뜰 고운학교	입양기관
	2010	동방누리학교	입양기관
강원도	2011	마리아의 집	-
충청북도	2011	해성학교(자모원)	-

교육청	위탁 지정년도	위탁교육기관명	비고
충청남도	2011	새소망의 집	-
경상북도	2011	대구혜림원	입양기관
경상남도	2011	로템학교	일반 대안교육기관
전라북도	2012	민들레학교	일반 대안교육기관
전라남도	2011	성모의 집	-
	2013	어린엄마동지	입양기관
제주	2012	에서원(무궁화아카데미)	-

교육청에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17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5개 교육청은 2014년에도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12개 교육청에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원한 예산은 2013년 총 34,905만원에서 2014년 32,578만원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개 교육청의 평균 지원 예산도 2013년 2,909만원에서 2014년에는 2,715만원으로 줄어듦. 예산규모별로 보면(그림 1), 1,000만원~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교육청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5개와 6개로 가장 많고, 5,000만원~1억원 미만과 1,000만원 미만 교육청이 각각 2개씩임.



[그림 1]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은 강사료 및 교재비 등 보통교과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교육청 대부분이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시설의 시설비 및 직원 인건비, 탁아비나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이나, 학생 미혼모 모두에게 보육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보육서비스는 학교 재학생 뿐 아니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양육미혼모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책임. 현재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자시설에서도 양육미혼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자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퇴소 이후에도 양육의 책임을 혼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서비스의 지원이 필수적임.

일단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애기 때문에 마음잡고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애 봐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에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애를 봐주거나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학생 미혼모 4)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실상 위탁교육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교재나 교구에 사용되는 예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강사료에 한정된 지원이 전부임. 위탁교육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강사료로는 너무 부족해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함. 일차적으로 낮은 강사료의 문제는 강사 수급과 직결됨. 어느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함. 강사료가 적다보니, 강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당초 교육청에서는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강사를 하도록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임금에서 정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는 어려움. 일부 기관에서는 학원 강사조차 구하기 어려워 대학생을 섭외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아예 강사료 지급 없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는 곳도 있음. 개중에는 강사에게 처음부터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함.

대개 시간당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좀 예산적인 문제에서 또, 그래 가지고 그냥 선생님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래요. 그냥 교통 기름 값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라고.(위탁교육기관 담당자 1)

설사 강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 강사가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은 학교와 달리 반드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음. 기관에 따라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용하기도, 별도의 프린트 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강사의 주도 하에 있음.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이 느슨할수록 교육장면에서의 강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강사의 변동은 교육내용과 학습방법 및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됨.

그러니까 딱 강사비만 나가는 상황이에요....(중략)...강사비가 저조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는 학원 강사 분이거나 아니면 과목이 사회나 국사 선생님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주변에 있는 대학교 학생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유동이 심한 거예요. 들쭉날쭉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위탁교육기관 담당자 2)

저희도 첫 해에는 강사비를 시간당 2만원 밖에 책정을 안 해주셔 가지고 첫 해는 필수과목 선생님들을 강사를 모실 때 관심은 있어 하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막상 시작했다가 다른 어떤 일이 생기시거나 하면은 그만 두시는.(위탁교육기관 담당자 4)

강사료도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실제 위탁교육기관에서는 강사료 외에도 탁아비 지원 요구가 절실함. 학생 미혼모 입장에서 위탁교육기관은 출산을 하면서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출산 후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임. 18개 위탁교



육기관 중 15개 기관은 모자 거주가 가능한 미혼모시설로 일반 대안학교와는 달리 시설 내에 기본적인 탁아시설을 갖추고 있어 탁아 인건비만 지원된다면 원활한 탁아지원이 충분히 가능함. 현재에도 미혼모자시설의 위탁교육기관들은 학생 미혼모가 교육받는 동안 탁아를 지원하는데, 탁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탁아 인력을 자원봉사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 시설 전체를 다 이용하니까. 사실 공간적으로는 꽤 이득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제일 애네들을 하면서 어려운 게 탁아비 주는데 있으세요? 탁아비는 안 줘요. 교육청에서....(중략)...그런데 이제 탁아원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생돈이 드는 거예요. 이 탁아모가 2명 이상은 들어가줘야지 애네들을 돌릴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 끼더라도.(위탁교육기관 담당자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탁교육시설을 전국에 산발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한 곳이라도 확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허술한 양적 확대보다는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임.

제대로 된 지원을 한 군데에다 해서 우리 미혼 엄마들은 ♀♀을 가던, ●●을 오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금도 이제 ◆◆◆쪽에서 대안 학교 때문에 저희 시설로 의뢰 받아서 대안 학교 학생으로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위탁교육기관 담당자 5)

## 2) 학생 미혼모의 위탁교육기관 이용규모

2013년 1년 동안 위탁교육을 받은 미혼모 수를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원교육청 10명, 인천교육청 8명의 순임. 한편, 부산, 울산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위탁교

육을 받은 미혼모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등 3개 교육청이 연간 단 1명의 위탁교육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결과적으로 2013년 1년 동안 전국 18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미혼모는 총 68명에 불과함.

〈표 2〉 2013년 교육청별 위탁교육 미혼모수 및 복교생수

단위: (%)

교육청	위탁교육생	복교생(복교율)
서울	15명	7명( 46.7)
경기	15명	15명(100.0)
강원	10명	7명( 70.0)
인천	8명	5명( 62.5)
제주	6명	1명( 16.7)
전남	4명	3명( 75.0)
대전	3명	3명(100.0)
대구, 광주	2명	2명(100.0)
충북, 전북, 경북	1명	1명(100.0)
부산, 울산, 세종, 충남, 경남	0명	-
계	총 68명	총 48명( 70.6)

위탁교육기관에서 다시 원적학교로 복교한 미혼모는 48명으로 원적학교 복교율은 70.6%로 나타났음.<sup>3)</sup> 이는 위탁교육을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은 원적학교로 복교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다른 대안학교로 이적하거나 이 또한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3) 산술적으로는 원적학교로의 복교율이 70.6%이지만, 복교율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된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주의가 요청됨.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위탁교육을 받은 미혼모 중에는 원적학교로 복교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서 바로 졸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원적학교에 복교해 학교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원적학교 학적으로 졸업한다는 점에서 복교한 것으로 산정됨.

이 같은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는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임신한 학생에 대한 터부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단지 68명의 학생 미혼모만이 교육받았다는 점, 2013년에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던 5개 교육청은 2014년에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한 12개 교육청의 예산도 전년대비 5.3% 감소한 점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함.

우리나라 십대의 출산건수는 공식적으로 연간 약 3,000건 정도로 조사됨.<sup>4)</sup>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십대 출산건수는 총 2,946건으로 전체 출산의 약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이후 십대 출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72건, 약 6.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십대 청소년의 출산건수는 연령에 비례하는데, 19세가 전체 십대 출산율의 60% 가까이 되고, 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15세~17세가 약 20% 정도를 차지함.

〈표 3〉 십대 청소년 연령별 출산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65,892
<b>10대 전체</b>	<b>2,774</b>	<b>2,815</b>	<b>2,934</b>	<b>2,998</b>	<b>2,946</b>
15세 미만	46	27	34	19	29
15세	72	73	91	62	74
16세	153	155	188	166	180

- 4) 십대 출산건수는 전체 출산건수의 1%가 채 되지 않지만, 십대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체 합계출산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15-19세의 출산율은 1.8명으로 전체 합계출산율 1.3명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5년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현상은 아님을 알 수 있음.

	2008	2009	2010	2011	2012
17세	292	317	353	328	374
18세	557	551	601	661	673
19세	1,654	1,692	1,667	1,762	1,6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년도).

이 연구에서는 중등학령기 미혼모 중 위탁교육 기회를 누리는 미혼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미혼모 자시설 15개소에 입소한 중등학령기 입소자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826명에 달함. 이는 이들 15개 미혼모 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3,379명 중 24.4%가 중등학령기 청소년임을 보여주는 것임. 중등학령기 입소자의 86.8%에 해당하는 717명은 고등학교 학령기이며, 109명은 중학교 학령기로 고등학교 학령기가 중학교에 비해 약 일곱 배 정도 더 많음. 그러나 이들 중등학령기 입소자 중 실제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모는 286명으로 34.6%에 불과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비진학한 경우로 파악됨.

<표 4> 미혼모자시설 입소 학생 미혼모 수

단위: 명(%)

				2011	2012	2013	전체
전체 입소자	학령기 입소자	중학교 학령기 (만12세~14세)	재학	23( 1.9)	17( 1.5)	19( 1.9)	59( 1.7)
			중퇴/비진학	18( 1.5)	15( 1.3)	17( 1.7)	50( 1.5)
		고등학교 학령기 (만15세~17세)	재학	80( 6.6)	69( 5.9)	78( 7.8)	227( 6.7)
			중퇴/비진학	184( 15.1)	171( 14.7)	135( 13.5)	490( 14.5)
		소계		305( 25.1)	272( 23.4)	249( 24.8)	826( 24.4)
		계		1,215(100.0)	1,161(100.0)	1,003(100.0)	3,379(100.0)

한편, 지난 3년간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인원은 196명으로 중등학령기 미혼모 중 불과 23.7%만이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중등학교에 적을 갖고 있는 학생 미혼모 입소생 중에서도 10

명 중 7명꼴인 68.5%만이 위탁교육 기회를 누린 것으로 밝혀짐. 물론 임신한 학생이 반드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8개의 위탁교육기관을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에 분명함.

특히, 2013년과 2014년에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5개 교육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 학생 미혼모 위탁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14년에도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됨. 그렇다면, 해당교육청관할 지역에서는 학생 미혼모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짚어봐야 함.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생 모집 권한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교육청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임.

이처럼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 미혼모가 적은 이유는 학교의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학생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 미혼모나 학부모, 교사들이 잘 모르는 것도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함. 전국에 18개의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미혼모 위탁교육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미혼모 위탁교육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학교는 미혼모 위탁교육이 학생의 임신울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하면서 쉬쉬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면서도 홍보를 금지하기도 함. 그나마 적극적인 교육청에서는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관련 공문을 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의 공문이 뿌려지는 속에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의 존재가 일선 교사들에게 부각되기는 힘든 상황임.

저희 처음에 지정 받을 때 장학사님이 지정을 해주기는 했는데 홍보도 못 하게 하시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학생이 미혼모가 된다니

---

5) 임신 초기에 발견하여 가족 등의 지원으로 비록 현행법상 불법이라 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 후 학교에 복귀했을 수도 있으며, 공교롭게 방학기간을 잘 활용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닐 수도 있으며, 본인이 대안교육기관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까 임신을 한 것 자체가... 홍보 함부로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협약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갖고 갔는데도 직인을 안 찍어주신 게 교육감님이 아시면.(위탁교육기관 담당자 4)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교사들은 물론이고, 위기학생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 학교상담사나 사회복지사조차 미혼모 위탁교육시설에 대해 모르고 일이 발생함. 한 학교사회복지사도 위탁교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임신 학생이 발생하자 그 때서야 직접 찾아보게 되었다고 토로함.

위탁교육에 대한 것도 저도 발등에 불 떨어져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상황이기도요. 저희한테 홍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브로셔나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터지고나서 혹시 있을까 해서 찾아보고 있어서 연계를 한거거든요. (학교사회복지사 2)

위탁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자율이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위탁교육을 알지 못한 채 임신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자퇴를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자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3) 타 지역 학생 미혼모 이용 규모

이와 함께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이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초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었음. 지금은 각 개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청별 지원 예산이 위탁생 규모와 관계없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 이로 인해 한 편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모의 경제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문제와 임신사실을 가능한 한 숨기고 싶어하는 학생 미혼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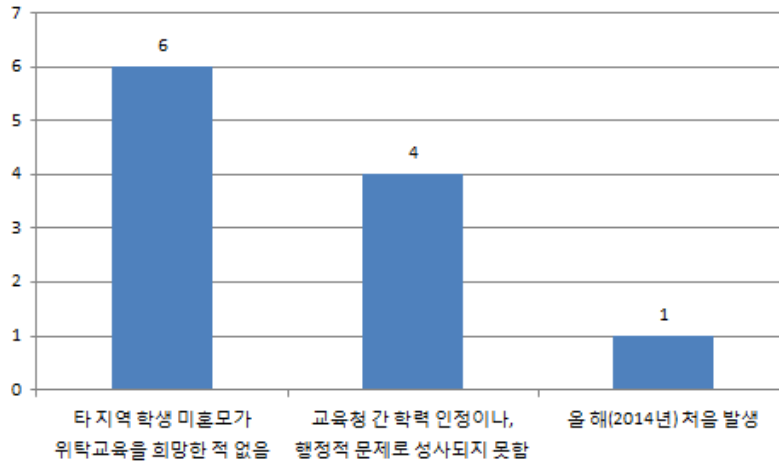
위탁교육기관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학생 미혼모들은 소문이나 이웃의 시선을 피해 거주 지역을 벗어나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위탁교육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원적학교가 소속된 교육청 외의 타 교육청 소속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최근 3년간 타 교육청관할 학교의 학생 미혼모가 위탁된 사례는 7개 기관에서 총 31명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위탁교육생 198명의 15.7%가 거주 지역을 옮겨 타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위탁교육기관별로 보면 타 지역 교육청관할 위탁교육생이 1명인 경우가 세 개 기관으로 가장 많지만, 7명이나 9명의 타지 학생을 받은 위탁교육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적지 않은 수가 타 교육청관할 학교의 학생인 위탁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은 각 교육청이 타 지역 교육청관할 학생의 위탁을 허용할 경우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5〉 타 지역 교육청관할 위탁교육생 수

		전체 사례수
총 학생수		31명
해당 사례 기관수		7개
위탁생수	1명	3개
3명	1개	
7명	1개	
9명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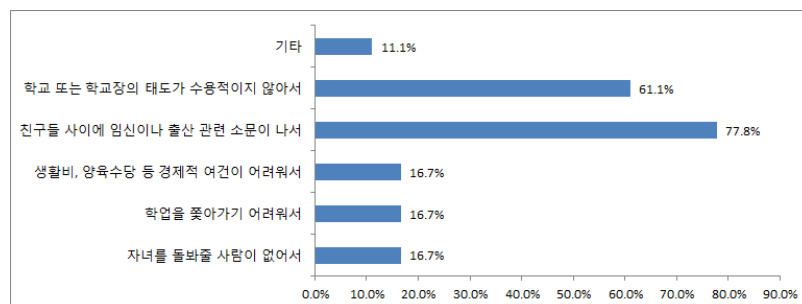
실제로 타 교육청 소속 학생 미혼모가 없는 위탁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타 지역 학생의 위탁의뢰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6기관이나, 교육청 간 학력 인정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기관도 4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교육청간 행정적 문제 또는 전학의 어려움이 타지역 위탁에 장애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 타 지역 교육청관할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 사례가 없는 이유

#### 4) 복교의 어려움과 재위탁 가능성

학생 미혼모들은 일정기간 동안의 위탁교육 후 원적학교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많은 학생 미혼모들은 소문의 염려,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위탁교육 후 원적학교로의 복귀를 꺼림. 위탁교육기관 조사에서도 학생 미혼모들은 다양한 문제로 원적학교로의 복귀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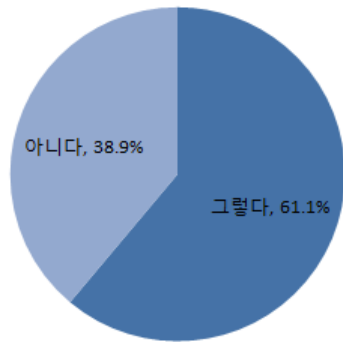


[그림 3] 원적학교 복교가 어려운 이유(1+2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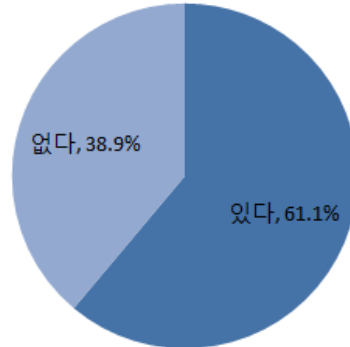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은 친구들 사이의 임신이나 출산 관련 소문(77.8%)임. 학교라는 집합적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십대 미혼모라는 낙인이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임. 그 다음으로 복교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학교 또는 학교장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인 것(61.1%)으로 보임. 설사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교사나 학교 측에서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을 돕지 못한다면 학교생활이 불편할 것을 우려하는 것임. 그 외에도 자녀양육 문제, 학업문제, 생활비 등 학생 신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문제가 위탁교육기관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학생이자 동시에 엄마로서의 두 가지 신분을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학업이나 생활밀착적인 문제들이 학생 미혼모에게는 본질적인 현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보다 소문이나 학교 측의 배타적 태도가 원적학교로의 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임. 다시 말해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문제들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학교로의 복귀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남아서 학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 대해 전체 18개 기관 중 61.1%에 해당하는 11기관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실제 최근 3년간 재위탁 사례가 있는 기관은 11기관으로(그림 5), 재위탁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모두 재위탁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는 원적학교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육 문제, 동료관계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 미혼모들이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4] 재위탁 교육 가능 여부



[그림 5] 재위탁 사례 유무

### 3 정책제언

#### 제안1) 국가시책사업으로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통합 지정·운영

학생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학생 미혼모에 대한 지역적 인식 수준의 차이를 비롯하여, 예산 지원 규모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구축의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음.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이성교제관련 처벌규정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별 학교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학생 미혼모 위탁과정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지역간 차이는 교육청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이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교육청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 규모 또한 이와 맞물려 교육청간 격차가 매우 크고,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수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지원 예산규모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학생 미혼모 위

탁형 대안교육기관이 처음 운영된 2010년에는 4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외형적으로 위탁교육기관이 4배 이상 증가한 18개로 확대된 지금에도 학생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총 예산은 35,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물론 여기에는 위탁생이 없거나 위탁교육생이 1, 2명에 불과해 아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교육청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지금처럼 교육청별로 각각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에 3, 4개소를 지정하고 교육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별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위탁생이 1명도 없는 교육청이 5개, 5명 미만이 7개 등 총 12개 교육청의 경우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이처럼 위탁교육생이 적은 데에는 학생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 임신사실을 비밀에 부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들이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에 입소하기 보다는 타 지역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음.

또 하나는 제주도에선 온 애가 있었어요,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 가는 곳은 경기도 아이들만 가잖아요,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제주도 아이도 인정해주는건 좋은데 이게 수업인정까지 [X]에서 해줘야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다른 위탁교육기관은 몰라도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서로 왔다갔다. 개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비밀보장 때문에 온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그럴 순 없고, 저희도 근데 그냥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이 많았거든요. (중략) 학력 인정을 해주는데 [X] 교육감이고 애 학습권 학점 인정 부분이 어디까지 한계가 되느냐 [X]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애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느냐, 모든 게 기관별로 위탁교육기관이 미혼모만 있는게 아니라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건 제가 봤을 때 공

유되고 그런건 아이들이 넘나들어도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 지역별로 저희가  
㉠ 보낼 때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협조공문을 띄어야하나 그런 경우  
가 많거든요, 아이들은 비밀 때문에 어떤 기관을 거쳐서 간다는 것은 행정적  
으로도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위탁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  
주도 애가 ☒☒에 와서 바로 처리가 되서 편리함이 있고.(d교육청)

남양주 학생도 있고, 순천 학생도 있고, 한겨레 학교에 있던 애도 온다고 오늘  
전화왔어요, 한겨레도 대안교육기관에 있던 애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또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미혼모인데 받아야지 그런걸 따지고 그러냐.(a교육청)

뿐만 아니라,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생에서부터 고등  
학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위탁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적정규모의  
위탁교육생이 있어야 학교급이나 학년을 고려할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  
다는 점에서도 권역별로 1개씩 전국에 3~4개의 대안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안2) 청소년 특화 미혼모자시설 확보

또한, 청소년 특화 미혼모자시설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청소  
년용이나 성인용 시설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에  
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미혼모들의 경우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과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  
음. 이런 가운데 입양기관에서의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 미혼모자시설의 확대나 신규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미혼모자시설 확  
충 시 청소년 특화 미혼모자시설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되, 미혼모자시설  
을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의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청소년 특화 미혼모자시설이 운영될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운

영은 물론 학적 취득이 어렵거나 위탁교육보다는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학생 미혼모에게 검정고시 준비를 보다 집중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생 미혼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의 학업중단 시기는 주로 임신 이전인 경우가 많음. 이는 재입학 등 원적학교로의 복교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탁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 미혼모가 위탁대상이 되는 학생 미혼모보다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 특화 미혼모자시설이 만들어질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제안3)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이와 함께 양육을 결정한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강사비와 교재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위탁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안정적 지원이 어렵고 보육서비스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려움.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 미혼모들은 자녀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탁아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더욱이 청소년 미혼모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점차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변귀연 외, 2009)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육서비스관련 예산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제안4) 임신 학생의 학습권 지원 매뉴얼 작성 및 보급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학생의 임신사건 발생 시 임신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가 해야 될 지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해야 함. 이 매뉴얼에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의 개정을 비롯하여, 자퇴를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명시함. 또한 출산휴가를 비롯하여 임신한 학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원적학교로의 복교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임신한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만 교육부가 2005년에 발표한 『학생임신사건지도와 처리요점』은 참조할 만함.

### 대만 사례 : 학생임신사건지도와 처리요점

1. 교육부는 양성평등교육법 제 14조 제 3항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가 임신 학생의 피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본 요점을 제정함.
2. 본 요점의 적용대상에는 각급 교육행정 주무기관, 공립/사립학교 및 학생이 포함된다. 본 요점에서 '학생'은 일반 학생 및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낙태, 유산 및 출산)경험이 있는 학생과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을 가리킴.
3. 학교는 학교의 학생임신사건에 대한 지도 및 처리 시 주의사항과 학생임신사건 지도 및 처리프로세스를 따라야 하고, 양성평등교육위원회가 학생 임신사건의 처리를 담당함. 미성년인 학생이 임신했을 경우 학교는 즉각 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장이 소집인이 되며 학생지도전담기관을 단일창구로 지정함. 성년인 학생 혹은 기혼 학생이 임신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학교는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커리큘럼이나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한 성 관념과 행위습관을 배양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나 학생 및 학부모가 임신한 학생이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보살피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학생이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의 피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

5. 학교는 임신 및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학생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리거나 명시적 혹은 암시적 방법으로 학생이 휴학, 전학, 퇴학 혹은 장기 휴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학교의 차별대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양성평등교육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신고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6. 학교는 학적 및 성적심사 및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여 임신 및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함.
7. 학교는 교육, 민정, 민간, 노동, 보건의료 및 경찰 등 기관의 자원을 통합하여 임신한 학생이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이 지도, 이관, 정착, 보건, 취업, 가정으로부터의 지원, 경제적 안정, 법률적 도움 및 다원화된 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각급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전항의 각 기관의 자원을 통합하여 부서(국 혹은 처 포함)간 협력팀을 구성하는 데 협조해야 함.
8. 학교는 교내 관련 하드웨어 시설을 개선하여 임신한 학생이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함.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함.
9. 교육행정 주무기관 및 학교는 교육활동이나 연구내용에 학생 임신의 예방, 처리 및 전문 지식 강화 등 관련 이슈에 관한 지도 및 연수를 포함시켜야 함.
10. 교육행정 주무부서는 학교의 학생 피임사건 예방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한다. 원주민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경비 우선 신청자격이 있음. 학교는 관련 경비를 마련하거나 각급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임신한 학생이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에 대한 지도 및 다원화된 적성교육과 학생 임신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업무를 실시함.
11. 각급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학생 임신 사건을 처리할 때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고 직업윤리에 따라 임신한 학생이나 자녀를 양육 중인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감독 및 지도함.
12. 학교측이 학생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아동 및 소년 복지법〉, 〈아동 및 소년의 성매매 방지 조례〉, 〈성범죄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혹은 기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통보조치를 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함.
13. 각 학년도 말, 학교는 학생임신사건의 처리상황을 해당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지방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통보 받은 상황을 종합하여 이를 중앙 교육행정 주무기관에 보고함.
14. 교육행정 주무기관은 학생 임신에 대한 학교의 예방 및 처리효과를 교무평가 시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킴.

## 4 기대효과

-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회 확대
-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생 미혼모 학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참고자료



- 변귀연·김혜래·이상희(2009). 청소년 미혼모와 그들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청소년복지연구. 11(1). 1-22.
- 성정현·김지혜·신원우(2011). 청소년 미혼모의 대안교육기관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223-258.
- 제석봉 외(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승희(2012). 미혼모자시설 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학교 사회복지. 23. 281-306.

**주관부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등 미혼모, 인권관련 담당 부서

**관계부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등 미혼모, 인권관련 담당 부서